

빈소부터 안장까지 국고로...지자체에 분향소 설치

노태우 국가장 어떻게

김부겸 총리 장례위원장 파주 통일동산 장지될 듯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장례를 주관하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26~30일 다섯동안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 거행되며 장지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장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 결정 사실을 알리며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어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제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례위원회의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

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충북혁신도시에서 여수로 이동한 27일 여수시 오천동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정문 출입 통제소에서 여수시민들이 입소를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프랑을 들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18 가슴 아파...과오 있었다면 용서해달라"

노태우 유언 공개

아들 통해 뒤늦은 사후 대독사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27일 아들 노재현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유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때늦은 사죄의 메시지가 담겼

다. 5·18에 대한 공개 참회 없이 생을 마감한 뒤 아들의 입을 빌어 유언의 형식으로 사후에 대독 사과를 하게 된 셈이다.

노 변호사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책임 시찰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전했다. 그는 "10년 넘게 누워 계시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 것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유승 유언은 아니지만 고인이 평소 생전에 해오던 발언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5·18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난 26일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망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학살범죄자 국가장으로 면죄부"...정부 결정에 유감

광주시·전남도, "조기 게양·분향소 설치 않겠다" 진정한 반성·사죄 없어...오월 영령·시민 뜻 외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도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 등은 국가장을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광주시는 오월 영령, 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정서상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지만 광주는 그럴 수 없다"고 이 시장과 김 의장은 말했다. 이들은 "고인은 5·18 광주 학살의 주역이었고 발포 명령 등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한 반성, 사죄, 진상규명 협조 없이 눈을 감았다"며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

고 40년 넘는 세월을 울분과 분노 속에 보내는 오월 가족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행방불명을 끝내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임은 생사를 초월해 영원하다"며 "의향 광주만이라도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길을 가서 전두환 등 5·18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죄를 끌어내고 진실을 밝혀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도 역시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장법에 따르면 분향소 설치의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조기 게양은 의무사항"이라면서도 "정부 방침은 존중하겠지만 전남도는 5·18 피해자 분들과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해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죽

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며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학살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우리 시민들 또한 사과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노씨는 대통령이기 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반란의 수괴"라며 "이런 노씨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어서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인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광주 진보연대도 "5월 학살의 핵심 범죄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 흘리며 지킨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 여수로

391명 해양경찰교육원 입소...내년 2월까지 사회적응훈련

지난 8월 입국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27일 여수로 거처를 옮겼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79가족 391명은 이날 오전 10시 버스 13대에 나눠타고 진천을 떠나 오후 2시 30분경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해경교육원에 머물며 내년 2월까지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6세 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 예정인 임신부도 2명이 있다.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법무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는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4개월간의 여수 생활을 마치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

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희망하는 지역으로 정착하게 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내고 "아프가니스탄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한다"며 이들의 여수행을 바랬다.

김 지사는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길 응원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유애로 포용해준 여수시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들과 가족이다.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협력자들과 그 가족이다. 한국 정부는 신변안전을 호소하며 한국행을 택한 이들을 지난 8월 26, 27일 군 수송기로 데려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처분하기 교환
힘든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룸 129㎡(39평)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순창군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8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흥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응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힐플러스 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이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상가매매 (상무지구)

-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점)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